



부활절...세월호 침몰 생존자 귀환 기도회 20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2014년 광주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종교인들이 세월호 침몰 실종자 생환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거 분위기도 침몰... 지방선거 연기론도

여야 정치권,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대책 마련 분주 경선 등 전략 수정 불가피... '여권 무능력' 여론 촉각

여야 정치권은 이번 주에도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구조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인양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이 기간이 지방선거 경선 시기와 겹칠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유례없이 국민의 저조한 관심 속에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체위원회 구성도 미룰 예정이다. 삼부면 선거 행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조지다. 순연된 경선 일정에 따라 오는 25일 대전시장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마저도 더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현재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고가 자칫 '여권 무능력'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세월호 실종자와 구조자 발표 혼선, 원할하지 못한 구조과정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치열한 경선전으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 야권 주요 광역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을 누르겠다는 선거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정지연합, 경선 일정 지연=그렇지 않아도 통합신당 창당 과정과 기초선거 무공헌 반복 등으로 지방선거 준비가 늦었는데 이번 사고로 일정이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일단, 광역단체장 경선 및 공천 작업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지사 후보들은 경선을 1주일 가량 늦춰 다음달 2일 또는 4일께 치러지는 제안을 당 선관위에 전달했다. 제주지사 후보들은 슬픔에 빠진 도민 감정을 고려해 경선일이 자체 단일화하거나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1차 부처격자 심사 결과도 당초 지난 18일 발표기로 했다가 사

고 여파 등의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 예비후보들도 사고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무실 개소식 등의 공식행사를 연기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지방선거 연기론=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월호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선거 일정 자체를 늦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미뤄 7·30 국회의원 재·보선과 함께 치러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시기 변경 단서 조항을 넣어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우선, 지방선거 연기에 따른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 여기에 여야가 경선 일정을 조정하면 후보 선출은 늦어지지만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2명 사망사고 후 도주...이탈리아 선장 등 2697년 구형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 日 선장은 승객 전원 구조 후 탈출

여객선 선장 대응 해외사례 세월호 실종자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선장의 대처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선장이 배를 포기하고 도주한 경우 큰 참사를 초래했지만 승무원들의 노력으로 인명피해를 막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1월 이탈리아 티레니아해 질러오 섬 인근에서 승객 4229명이 탑승한 호화 크루즈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가 침몰했다. '이탈리아판 세월호'로 불리는 이 사고는 선장 프란체스코 세티노 선장이 판단착오로 암초에 부딪쳐 발생했는데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후 승객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선장은 대량 학살죄(15년), 배를 좌초시킨 죄(10년)와 함께 승객 1인당 8년씩 포괄해 총 2697년을 구형받아

현제 복역 중이다. 지난 2009년 11월에도 7900t급 아리아케호는 도쿄에서 오키나와로 가던 중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전도됐다. 1995년 일본 하야시카에 조선소에서 건조된 아리아케호는 정원 426명 여객선이었다. 아리아케호는 운항 중 여객선 뒷부분에 6m가 넘는 파도를 맞아 적재된 컨테이너와 차량 등 화물 2400t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전도됐다. 당시 선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조요청을 한 뒤, 배가 기울어져 탈출이 어려운 승객들을 소방호스로 끌어올려 구조시켰다.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승무원 6명은 배를 끝까지 지키다가 침몰 11분 전 구명 뗏목을 타고 탈출했다.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였지만 선장과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여야, 재난·재해 법·제도 정비 착수

세월호 침몰 사고 계기...여, '재난청' 신설 야, 안전규제 강화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재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현재 실종자 수색·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다각도로 검

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사고의 규모가 클수록 여러 기관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고만 보더라도 안전행정부·군·경찰 등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면서 "더욱이 재해대책 기구도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에 각각 있어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장기적으로 대형 안전사고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당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후진적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도

개혁, 안전사고 구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정책위 전담위원들에게 해상 운송 관련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점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맹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정책이 본격화하면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2009년 일본서 전기배선 화재

세월호를 일본의 해운사가 소유하던 시기에 이 선박의 전기 배선이 낡아서 불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일본 운수안전위원회가 공개한 사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5월 25일 오전 7시45분께 세월호(당시 명칭 '페리 나미노우에 호')의 조리실에서 불이 났다. 당시 세월호는 가고시마(鹿兒島)현 가고시마시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었고 기관을 보수·정비하기 위해 출근한 기관지원원

이 발견했고 정박당직자 등이 진화했다. 정박당직자 등 6명이 승선해 있었으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리실 천정, 벽, 전기 배선이 일부 훼손됐다.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 마루에이 페리는 가벼운 사고로 판단해 응급조치한 뒤 이날 오후 6시에 예정대로 출항했고 나중에 귀항하고 나서 피해 부위를 수리했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중개업자를 거쳐 한국 측에 판매됐다. /연합뉴스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년6억 수익

모델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른,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매가 33억(응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절,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욕실,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